對 外 秘

국무총리 대국민담화의 영향 분석과 대응 방향 검토

2018. 6. 5. 기획조정실

1. 검토 배경

▣ 3. 12. 이완구 총리 대국민담화 발표 ⇨ '부정부패와 전면전' 선언

☑ 주요 내용

▶"저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**부정부패를 발본색원**하겠습니다. 정부는 모든 **역량과 권한, 모든 수단을 총동원**하여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겠습니다."

▣ 정국에 상당한 파장 ⇨ 의미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 있음

● 향후 BH와 여권의 움직임과 정국의 향방을 판가름할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

▣ 특히 사법부에 미칠 영향을 예측 ⇨ 대응 방향 검토 필요성이 큼

● 주요 사법정책 추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향 마련 ⇨ 적극적·소극적 대응 방향 모색

2. 일반적 의미 분석

가. 배경

▣ 최근 상황 ⇨ 집권 1~2년차에 가시적인 성과·업적을 거의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지지율 하락세 계속

● 불안감·절박감 ⇨ 가시적 성과를 쌓기 위한 '골든타임' 선언

-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 ⇨ '4대 부문 구조개혁' 선정

● 하지만 국정 난맥상은 계속

- 이완구 총리 지명 과정에서의 혼선, 담뱃값 인상 논란, 연말정산 후폭풍

나. 정치적 함의

▣ 조기 레임덕 방지를 위한 '집권 3년차 어젠다'

● 최근 BH는 역대 정권의 경험에 따라 조기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한 '집권 3년차 어젠다'를 모색해왔음

☑ 역대 정권의 조기 레임덕 방지를 위한 '집권 3년차 어젠다' 선포 사례
▶문민정부 ⇨ 역사바로세우기 운동 ▶국민의정부 ⇨ 남북정상회담 추진
▶참여정부 ⇨ 대연정 제안 ▶MB정부 ⇨ 4대강 사업 강행 선언

- 하지만 획기적인 아이템은 찾지 못하였고, 대신 그 역할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된 '4대 부문 구조개혁' 이 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음 ⇨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어젠다로서 '부정부패와 전면전' 아이템을 택한 것

▣ 또한 '집권 3년차 기업 수사'의 일종으로 보는 시각도 있음

● 역대 정권은 집권 3년차에 지지율 하락을 막고 다가오는 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대형 기업 수사를 벌여왔음

☑ 역대 정권의 '집권 3년차 국면 전환용 대형 기업 수사' 사례
▶참여정부 ⇨ 론스타 주가조작 수사[2005. 10.]
- 이후 현대차 비자금 수사[2006년], 삼성그룹 비자금 수사[2007년]으로 이어짐
▶MB정부 ⇨ 씨엔그룹 수사[2010. 10.]
- 이후 부산저축은행 수사[2011년],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수사[2012년]으로 이어짐

- 기업 수사는 정권 입장에서 불리할 것이 없음 ⇨ 부정부패 척결이란 대의명분이 있을 뿐 아니라 비자금 유입 경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 경고 신호를 주기 때문

- '이명재 민정특보-우병우 민정수석' 으로 이어지는 청와대 '민정 라인업' 이 이런 점을 고려해 이번 수사를 기획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음 ⇨ 수사를 맡은 조○○ ○○○○지검 특수○부장은 직전 대검 ○○○○ 수사지휘과장으로서 '검찰총장의 직할부대장' 으로 불리기도 함

다. 타깃[target]과 지향점

▣ **대국민담화에서 거시한 '고질적 부정부패'의 예 ⇨ 중요한 시사점**

> ☑ **대국민담화 주요 내용**
>
> ▶"최근 ①**방위 사업**과 관련한 불량 장비·무기 납품, 수뢰 등의 비리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②**해외 자원 개발**과 관련한 배임, 부실 투자 등은 어려운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. 일부 ③**대기업**의 비자금 조성, 횡령 등의 비리는 경제 살리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입니다. 또한 개인의 사익을 위한 ④**공적 문서 유출**은 우리의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일탈 행위입니다."

▣ **1 '방위 사업·해외 자원 개발' 언급 ⇨ 당정청 관계 주도권 탈환 선언**

- MB 정권의 失政 사례로 지목되고 있는 **이른바 '사자방'**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음 ⇨ **일부 언론에서는 MB를 최종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선정적인 분석**도 있으나, 그보다는 非朴계에 당권을 내준 데에 대한 반격을 선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적임
  - **친이계 인사들에 대한 경고·압박 메시지** 전달 목적으로 보임
- 한편, 직전 정권의 실정 사례를 들추어내어 현 정권의 도덕적 선명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강함 ⇨ 다가오는 **총선 대비용 포석**

▣ **2 '대기업' 언급 ⇨ 경제 활성화에 재벌의 적극적 협조·동참 주문**

- 재계가 경제 활성화에 대한 **정부의 지원 요청을 묵살할 경우** 검찰의 칼날이 언제든 재벌 오너에게 향할 수 있다는 메시지 전달
  - 이른바 **'땅콩 회항' 사건으로 조○○가 실형**을 선고 받음 ⇨ 현재 재계는 司正 국면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임
  - 담화 발표 당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경제5단체장을 만나 청년 고용, 임금 인상, 투자 활성화 등에 **적극 동참해달라**는 뜻을 전달하기도 함

▣ **3 '공적 문서 유출' 언급 ⇨ 레임덕 최소화를 위한 공직 기강 확립 선언**

- 공직 기강 해이는 엄단할 것임을 공직 사회에 경고한 것임

라. 결과 전망

▣ **[단기적 전망] 한동안 상당히 가시적인 활동과 이를 통한 일시적 성과를 거둘 것**

● 당장 대국민담화 **다음날인 3. 13.** ⇨ **포스코건설 압수수색**

● 비박계, 재계, 공직 사회 등을 압박하는 카드로서 **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내기 위하여 상당한 액션·퍼포먼스**를 취하려 할 것임

- **추가적인 대기업 수사**에 나서거나 **비리 공직자에 대한 적발·엄단 조치**를 취할 가능성 높음

▣ **[중·장기적 전망] 하지만 결국 한시적인 정치적 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**

● 대국민담화에서 언급한 사안들은 대부분 **이미 결론이 도출된 사안들**임

- **방산 비리·해외 자원 개발** ⇨ **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마무리**될 가능성

- **청와대 문건 유출** 사건 ⇨ **사실상 이미 종결**된 사안

● **대기업의 비자금 문제**가 시작·진행될 수 있으나 역시 **한계 있음**

- 재계를 압박하여 경제 활성화에 협력시키는 데에도 한계 있음 ⇨ 대기업에 대한 **장기간의 무리한 수사는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역효과**

● 또한 **올 하반기부터는 총선 준비 정국**으로 접어들 것이 확실시

- 총선에 임박한 시점에 각종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**현 정권 인사에게 예기치 못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는 등 위험 요소**가 큼 ⇨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**무리한 수사는 자제**할 수밖에 없을 것임

☑ **역대 정권의 '집권 3년차 어젠다' 내지 '국면 전환용 대형 기업 수사'의 효과**
⇨ **역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음**

▶**참여정부** ⇨ 4·30, 10·26 재보선 **여당 참패**

▶**MB정부** ⇨ 6·2 지방선거 **여당 참패**

3. 對사법부 영향 예측

가. 직접적 영향 ⇨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

▣ **사법부도 공직 사회의 일부임 ⇨ '사정 태풍'의 영향권 내에 들어선 것임** ☞ **[착안점①]**

- 레임덕 방지를 위한 공직 기강 확립은 **전체 공직 사회를 대상**으로 하고 있음 ⇨ 이에는 사법부도 **예외라고 할 수 없음**

▣ **하지만 어디까지나 잠재적인 대상이 된 것일 뿐임 ⇨ 위험성·가능성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음**

- 레임덕 방지라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**행정부 산하 공무원이 기강 확립의 최우선 대상**일 수밖에 없음 ⇨ 아직까지 **사법부는 상대적 후순위**임

나. 간접적 영향 ⇨ 다양하고 포괄적일 것으로 예상

▣ **1검찰·법무부의 득세 계속 ⇨ 사법부의 영향력 상대적 약화 우려**

> ☑ **"이완구 담화 하루만에 황교안, 檢에 '부정부패 척결' 지침"**
>
> ▶"황 장관은 이날 검찰에 **'부정부패 사범 단속 강화 지시' 지침을 하달**했다고 밝혔다. **이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지 하루만**이다…아울러 "비리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**국가 혁신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**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"고 주문했다."[2015. 3. 13.자 아시아경제]

- 지난해 **세월호 사건 수사의 교훈** ⇨ 초반에는 다소 무리해보였지만 **속전속결·총력전式의 수사**를 통해 **검찰·법무부는 BH의 신임을 획득**하였음

- '부정부패와 전면전' 국면에서도 **발 빠르게 대응**하여 정권의 신뢰를 확보하려 나설 것임 ⇨ 그리고 **실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가능성 높음**

- 물론 그 과정에서는 다소 시행착오를 겪거나 무리수를 둠으로써 일시적으로 비난 자초·이미지 실추를 겪을 수 있음(ex. 유○○ 검거 지연·실패 등 ☞ [착안점②]) ⇨ 하지만 '구속 내지 기소'를 성공의 지표로 삼는 검찰 기획수사의 특성상 일정 정도 이상의 성과는 확보할 것임

> ☑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례
>
> ▶다소 무리한 듯한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였으나, 보수적인 여론의 압박을 활용하여 헌재로부터 압도적인 차이의 정당해산 결정을 받아냄 ⇨ 결국 법무부와 헌재 모두에 대한 BH의 전폭적 지지·신뢰로 이어졌음

> ☑ 최근 헌재의 긍정적 이미지 축적·제고 현황
>
> ▶[對BH] 통진당 정당해산 결정 ⇨ 정권으로부터 '체제·정권 유지의 협조자, 국정운영의 동반자'라는 긍정적 이미지 획득
>
> ▶[對국민] 간통죄 위헌 결정 ⇨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를 통하여 통진당 정당해산 결정으로 말미암은 수구적·보수적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국민으로부터 '기본권 수호자, 개혁적·진보적 판단자'라는 긍정적 이미지 획득

▣ 2무리한 수사·기소로 인한 후폭풍 ⇨ 부담스러운 사건 처리에 대한 법원 부담 발생·가중 ☞ [착안점③]

● 성과를 내기 위한 검찰의 수사·기소는 무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⇨ 수사 과정에서 영장 발부 여부, 본안에서의 유·무죄 판단 등에서 법원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임

- 특히 민감한 사안의 경우 BH·언론 등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법원의 결정이 그에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전 방위적인 비판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

> ☑ [사설] '벤츠 여검사' 무죄 국민 상식과 거리 멀다.
>
> ▶"대법원의 벤츠 여검사 무죄 판결은 공교롭게도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에 대한 무관용을 선언한 날 나왔다. 행정부와 사법부가 손발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, 대법원이 판단하는 부정부패의 기준은 국민 일반의 상식, 정서와는 사뭇 동떨어진 것이 사실이다. 검찰이 부정부패를 적발해도 법원이 과연 국민이 수긍할 만한 수준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."[2015. 3. 14.자 서울신문]

4. 대응 방향 검토

가. 소극적 측면

▣ **[착안점①☞] 사정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지 않도록 내부 구성원에 대한 자체적 단속 강화**

● 강도 높은 사정 국면에서 **자칫 사법부 구성원의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 사법 개혁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**이 있음 ⇨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**위기 점검·관리 태세를 강화**하여야 함

● **가까운 과거**에도 국가적인 위기 상황 또는 사정 정국에서 내부 구성원에 대한 **단속을 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이 초래**된 사례 있음 ⇨ **미온적인 대처로는 위기를 예방할 수 없다**는 교훈

> ☑ **작년 세월호 사고 직후 공직자의 처신과 관련한 위기 사례 발생**
>
> ▶사건 발생 **초기에 적극적인 대처**를 함으로써 **상황을 조기에 진화**하였음 ⇨ 하지만 만일 조기 진화에 실패하였다면 **어떠한 결과를 불러왔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위기 상황**이었음
>
> ▶당시에도 **사례 발생 이전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맞아 공직자로서 처신에 주의할 것을 미리 내부 구성원에게 안내·공지한 터**였음

● 1곧 개최될 **전국수석부장회의, 전국사무국장회의** 등에서 최근 정국과 관련하여 내부 구성원들이 **긴장감을 유지하여야 함을 강조·전파**할 필요가 있음 ⇨ 2이후 **전체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에 관하여 안내·공지**하여야 함

- **CJ께서도 각종 말씀을 통하여 이를 강조하실 필요**가 있음 ⇨ '부정부패와 전면전' 에 **직접적으로 동조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으나** 기존의 철학, 즉 사법 신뢰 회복·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러한 **취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녹여 말씀하실 필요**가 있음

나. 적극적 측면

▣ **[착안점②☞] 상고법원안 입법 등 주요 사법정책 추진 시기를 면밀**

하게 조율하여야 함

● '부정부패와 전면전'을 통하여 다소나마 **BH와 여권이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**은 상고법원안 입법 등 주요 사법정책 추진에 **유리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아야 함**

- **특히 검찰·법무부의 득세**로 사법부가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임

● 하지만 이와 같은 司正 **국면은 항상 '양날의 검'의 성격**을 가지고 있음 ⇨ 특히 **검찰·법무부가 실책을 저지르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**이므로 **타이밍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**하고 있어야 함

- 아래에서 언급하는 **주요 사건의 처리 시기와도 연관시킬 필요**도 있음

▣ **[착안점③☞] 주요 사건 처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함**

● '검찰권 적절한 견제 vs. 정권과의 적정한 관계 유지'라는 틀 속에서 **사법부가 적정한 스탠스를 유지**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함

- 특히 **불필요하게 언론이나 BH의 오해를 살 필요 없고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여야 함** ⇨ 관련 사건 처리 시 **진의가 충분히 설명·전달**될 수 있도록 **공식적인 공보 활동을 강화**하는 동시에 **비공식적인 대화 채널도 적극적으로 가동**하여야 함

● **관심 사안의 신속 처리**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

- **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**에 대하여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☞ **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,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** [끝]